

공급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성명·보도

[기자회견문] 국민의 촛불저항에 겸허히 복무하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성일 2008.06.17 작성자 대변인실 Views 2315

Attachment파일 다운로드 첨부-민주노총 투쟁계획 및 일정.hwp

[기자회견문] 국민의 촛불저항에 겸허히 복무하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광우병식고기수입으로 시작된 촛불항쟁이 두 달째 밤마다 타오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 된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의 승자독식 양극화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이명박정부의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불태우기 위한 희망의 촛불이 되어 수천수백만으로 자라고 있다. 민주노총은 누구보다 먼저 깨닫힌 양심과 맑은 눈으로 촛불을 든 어린 학생들의 진실 앞에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의 장강이 승리의 바다로 나아가는데 복무하기 위해 지난 투본회의(4일)에서 총파업찬반투표를 결정하였다. 총파업투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6일 개표한 결과, 전체 63만 여명 조합원 중 51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투표에서 27만 명이 참여하여 70.3%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짧은 투표기간으로 미쳐 투표를 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투표를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16일 투본회의에서는 7월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광우병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민생의 위기를 물고 올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저지하는 동시에 폭등하는 기름값과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재앙을 불러올 대운하정책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며 고삐 풀린 시장만능정책으로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투쟁이다.

그러나 사면초가에 내몰린 이명박정부는 국민여론을 인위적으로 호도하려고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을 불법이라 하고 있다. 이는 헌법어디에도 정치파업을 불법이라 규정 한바가 없음에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비열한 술책에 불과하다. 정당한 근거도 없이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다느니, 생계형파업이 아니라 느니 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폄해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노동자가 광우병에 걸리게 되면 건강을 잃어 아예 노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바, 건강은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근본조건이다. 또 공공부문 민영화는 교육과 의료를 비롯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인 에너지, 물, 교통 등을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어 전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으로 노동자가 임금얼마를 인상할든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이다.

정부는 더 이상 부질없는 여론호도를 일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투쟁과 총파업은 정당하다. 조합원들에게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총파업찬반을 물었으며 국민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한바, 이미 정당성은 확증되었다.

우리의 투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투쟁은 절망에 찬 몸부림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로부터 불타 오르고 있으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은 금속노동자들의 투쟁,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의료민영화반대 투쟁, 공공노동자들의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투쟁으로 이명박정부와 건곤일척의 싸움을 할 것이다.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의 비즈니스플랜들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루어 갈 민주노총의 촛불장정은 언제나 시민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성장해갈 것인바, 언제나 승리다.

2008. 6.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Update Delete List

공공민중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